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을 방문,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왼쪽) 이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내년 전남의 주요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광주시·전남도 제공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역대 최대'

2만2,787ha...도, 육성 17년만 무농약 인증 앞질러

전남도가 민선 7기 들어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친환경농업을 중점 육성한 지 17년 만에 유기농이 무농약 인증면적을 앞질렀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 집계결과, 도내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722ha보다 7,065ha 증가한 2만2,787ha로, 역대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3만7,610ha의 60.6%에 해당된다. 특히 도내 전체 인증면적 4만4,567ha 중 유기농은 2만2,787ha(51%)로, 역대 처음으로 무농약 인증면적 2만1,780ha(49%)를 앞질렀다. '과수·채소 중심의 품목 다양화'도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과수는 올해 목표 1,082ha보다 2ha가 증가한 1,084ha, 채소는 1,048ha보다 143ha가 증가한 1,191ha로 나타났다.

유기농 중심의 품질고급화 전략이 성과를 거둔 것은 민선 7기 들어 친환경농업 과에서 식량원예과를 분리,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전국 최초의 유기농명인 지정, 유기농 지속직불금,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 등 차별화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 1만 8,000t(630억원)이 지난해 서울 등 약 6,000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고, 전남도내 모든 학교에 연간 3,362t(20억원)의 유기농쌀이 공급된 것도 한몫했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공급망을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과 꾸러미 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수출·비대면 판매 등으로 다양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며 "유기농 중심의 품목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내년 국비 확보” 광주·전남 총력전

민주당 원내대표·기재부 2차관 등 릴레이 면담
광주형일자리·공기산업·경전선 고속철 등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내년도 예산심사가 한창인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근 민주당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지역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안 차관에게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세트 개발 ▲자기응용과학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 국회 예결위 박흥근·추경호 간사를 만

난 자리에서는 ▲정부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반구축과 정착 지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이지만 광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며 “지난 2년간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을 만난 김 지사는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등 7건의 핵심 예산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기점변경 등 3건의 정책현안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흥근 예결위 간사 및 서동용·위성근 사에 대해 ▲전남 산단대개조 추진 지원 ▲433MHz 기반 드론 운용 통신기술 개발 및 실증 ▲유·무인기 통합 인증 시험인프라 구축 등 19건의 현안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에서 김 지사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국립정원문화센터 설치 ▲e-모빌리티 공적 고도화 기반구축 등 5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기재부 안도길 예산실장 및 예산실 심의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 22건을 건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호남지역 예산을 총괄하는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삼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남해안·남중권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건립 등 5건의 영호남 협력사업을 건의하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날까지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광산구의회, '젓은 갑질' 물의 의원 제명 해당 의원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광주 광산구의회가 상습적인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광산구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무소속 조상현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선인 조 의원은 갑질 문제로 30일 출석정지 등 2차례 의회 차원의 징계, 1차례 소속 정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산구의회 윤리특위는 조 의원의 갑질 문제

가 고질적인 만큼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실명으로 갑질행위를 지적받으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공무원노조는 이관개입, 폭언과 고압적 태도, 무리한 요구 등 갑질행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오해와 진실을 밝히고 증명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봉 기자

도, '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영암 선정

3억1천만원 투입...태양광 리모델링 주민 편익 증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공모'에 영암군 신기마을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선정위 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로 영암군 신기마을과 충남 홍성군 신촌마을을 선정했다. 영암 신기마을은 총사업비 3억 1,000만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받게 되며,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 공동 이용시설을 폐시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얻어진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탈바꿈한 농촌 지역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마을회관들이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농작물·축산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내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국비 222억원(전국 1,566억원 중 14.2%)을 확보했으며,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모델을 구축하고 도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화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시, 남도관광 이끝 여행전문가 양성

광주시는 나주시·목포시·담양군과 함께 남도관광을 이끝 여행전문가를 양성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4개 시·군이 주관하는 '데마 여행 10선, 남도맞이행 사업의 일환으로 '2020 남도투어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 개강해 오는 30일까지 프리미엄 해설사 교육과정, 청년해설사 육성과정, 창조인력양성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다.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 관광발전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발전방향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설사 육성교육 ▲스마트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뉴미디어 플랫폼·온라인여행사(OTA)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등 변화하는 국내 관광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관련학과 교수와 현지 여행사, 관광벤처 운영 대표, 온라인여행사 실무자, 인트라밴드 여행사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지역관광 불균형 위기 해소 및 지역상생을 위한 관광생태계 개선방안 등을 현실적인 대안 및 코칭으로 실시하고 있어 참여 교육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황애란 기자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지역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역이 함께 살아나도록 서울시가 방법을 찾습니다

• 3대 분야 • 9개 추진과제 • 39개 상생사업 추진 중

서울-지역 상생사업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기획행정 → 대외협력

서울시는 전라도와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사람

- 공무원 인사교육
- 귀농귀촌 지원
- 농촌일자리 지원
- 농촌체험교실
- 문화·예술공연 교류 확대
- 박물관·미술관 전시 교류 확대
- 서울농장
- 서울시 공무원 교육과정 지방공무원 개발
- 서울자원 지역청년 개발
- 서울-지방 청년교류 공간 운영
- 지역청년 혁신체험 학점인정프로그램
- 지역 연계 일자리창출
- 지역정보 교류공간 상생플랫폼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청년농부, 서울을 누비다
- 청년 지역교류 지원
-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
-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및 단안학교 교류

문화

-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 서울-타 지자체간 MICE 공동마케팅
- 마을과 마을 상생공동체 MOU 체결 지원
- 상생 관광패스
- 온라인 서울국제트래블마트
- 자치분권대학 서울캠퍼스
- 지자체간 다자간 MOU 활성화
- 지역상생 홍보관
- 찾아가는 혁신로드
- K-트래블버스
- 혁신기술 지역 공유

물자

- 김장문화제
- 과잉공급, 피해농산물 상생 판로 시스템 구축
- 공공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영
- 농부의 시장
- 농업공화국 지역별 코너 운영
- 도농상생 공공급식
- 상생상회
- 지방폐교 활용 자연체험 캠핑장
- 지역-전통시장 상호협력 공동마케팅